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
해고 쉽게, 임금 낮게, 비정규직 확대!

4·24 총파업으로 박근혜 공세에 제동을 걸자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결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총투표에 들어간다. 압도적 가결로 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의 기세를 모아야 한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당선한 지 4개월 만에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다. 우리 측의 준비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공세가 몰아치는 지금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음 투쟁도 기약할 수 없다.

지금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하게 밀어붙여,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악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4월 선제적 총파업 계획은 올바르고 불가피하다.

박근혜는 최근 지지율이 추락하는 위기를 겪었지만, 한 발 물러서지는커녕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려 한다. 박근혜의 반노동 공격은 집요하고 필사적이다.

박근혜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하고 자본가 계급을 살리고자 집요하게 달려들겠다는 뜻이다.

박근혜는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후자금을 강

탈해서, 자본의 비용을 줄여 주려 한다. 수익성 하락을 만회하고자 노동의 몫을 줄이는 게 저들의 목적이다.

박근혜가 필사적인 만큼 우리 편도 단호함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러려면 4·24 총파업이 ‘무늬만 총파업’이 되서는 결코 안 된다. 비록 하루일자리라도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조들이 함께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갈라치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의 사악한 인간질에 맞서 연대와 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박근혜는 틈만 나면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 고통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정당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며칠 전 주요 일간지 1면 하단 광고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라는 노골적인

문구를 뽑고, 장그래 역 배우를 내세웠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최저임금 인상 얘기를 흘리는 것도, 박근혜가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통과를 미룰 것처럼 말하는 것도 모두 갈라치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간질과 시간차 공격으로 우리를 각개격파하려는 박근혜에 맞서, 서로의 요구를 지지하며 함께 파업에 나서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응은 없다.

또, 박근혜의 사회적 합의 모양새 만들기 **에** 잘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와 국민대타협기구(공무원연금)에서 3월 말 시한에 맞춰 ‘합의’를 만들어 내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말이 좋아 ‘합의’이고 ‘대타협’이지, 노사정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추진하는 수단일 뿐이다. 국민대타협기구도 마찬가지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공무원 단체들과의 합의에

따른 것인 양 모양새를 만들고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것일 뿐, 대타협기구 안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생각은 전혀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박근혜는 대타협기구를 통한 ‘합의’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을 교란시키고 싶어 한다. 공무원노조가 들러리 서기를 거부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한다면 전체 노동자 투쟁을 전진시키는 데서 큰 힘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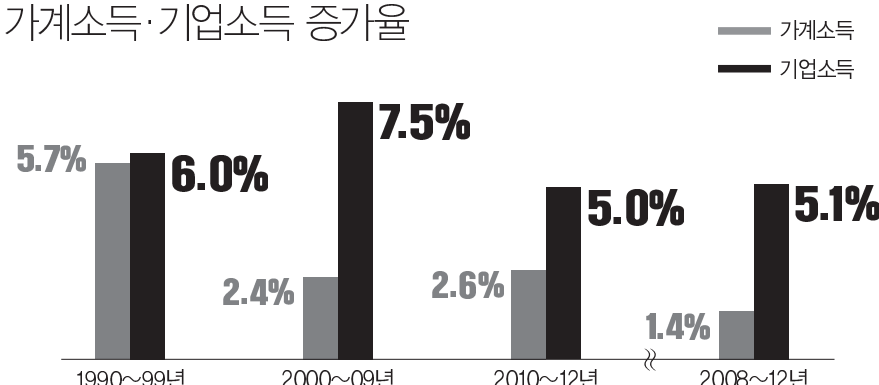
희망

이미 노동자들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1997년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노동자들이 창출한 부에서 그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몫이 크게 줄고,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늘었다는 의미다.

우리의 피땀을 더 빼앗길 것인지, 저들의 공간을 열 것인지는 우리의 투쟁에 달렸다. 돈이 없는 게 문제는 아니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만 5백조 원이 넘는다. 국내총생산의 36퍼센트에 이르는 규모다.

지금 박근혜와 한판 붙고 싶은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앞장서 박근혜에 맞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단호하게 나서 박근혜에 맞선다면, 전체 노동자 계급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계소득·기업소득 증가율



박근혜는 우리를 인간질해 각개격파 하려 한다

모두의 요구를 함께 걸고 단결해서 싸우자

박근혜는 아주 사악하게도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인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은 “찰밥통”으로 비난하는 이유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공공부문-민간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왜 우리 모두의 일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를 완전히 틀러리로 만들며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이 말한 사회적 합의는 순전히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의 개악으로 국민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 놓고 이제 와서 '형평성' 운운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 최근에는 사적연금 가입을 지원해 삭감된 연금을 벌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곰수'안을 내놓으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의하는 새정치연합과 서둘러 타협을 조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곰수'안은 사적연금만 활성화시키고, 삭감된 연금 벌충에서도 보험 안정성에서도 보완책이 될 수 없다.

국민연금 개악의 지렛대

대타협기구 본질이 폭로되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자, 시급히 투쟁을 조직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일부 활동가들은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 민주노총 4월 총

파업에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것은 단지 공무원 연금 대상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도 미노의 포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손보려 한다. 박근혜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까지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던져 주려는 것이다. 이는 재정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떠넘기려는 공격의 일환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성공한다면, 공공부문만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민영화 정책인 '공공부문 2단계 정상화' 추진에도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부문까지 공격을 확대할 동력을 얻으려 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뒤따를 공적연금 개악을 막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예봉을 꺾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투쟁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조건 하락

정규직 “과보호” 비난이 노리는 것

박근혜는 대기업 정규직이 “과보호” 됐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겠다고 내놓은 조처들 -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늘리는 - 은 실제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들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제도를 개악하려 하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무너지면 무조노·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말로 사측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 해결, 비정규직 보호?

박근혜는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 고통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청년들에게 저질 불안정 일자리를 강요하는 주범은 정부와 사용자들이다. 지금 박근혜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도 청년·비정규직을 더한층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 것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따로 있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만 5백조 원이 넘는다. 이런 돈을 사용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공부문에 대한 ‘선도’적 공격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밀어붙이려 한다. 업무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과 단협 무력화를 추진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악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서도 공공부문은 최전선인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이런 공격에 성공한다면, 민간부문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공공부문 제물 삼기를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임금 삭감

정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약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전반의 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고령자 임금 깎기 / 임금체계 개악: 호봉제 없애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임금 삭감하기 / 통상임금 억제: 통상임금 최소화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하기 / 탄력적 근로시간제: 초과근로 수당 안 주기 등.

● 비정규직 확대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보호”는 완전한 위선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려 한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리기 / 파견 확대: 55세 이상과 고소득 관리·전문직(교사, 간호사 포함)에게 전면 허용 / 사내하청 합법화: 불법파견 판결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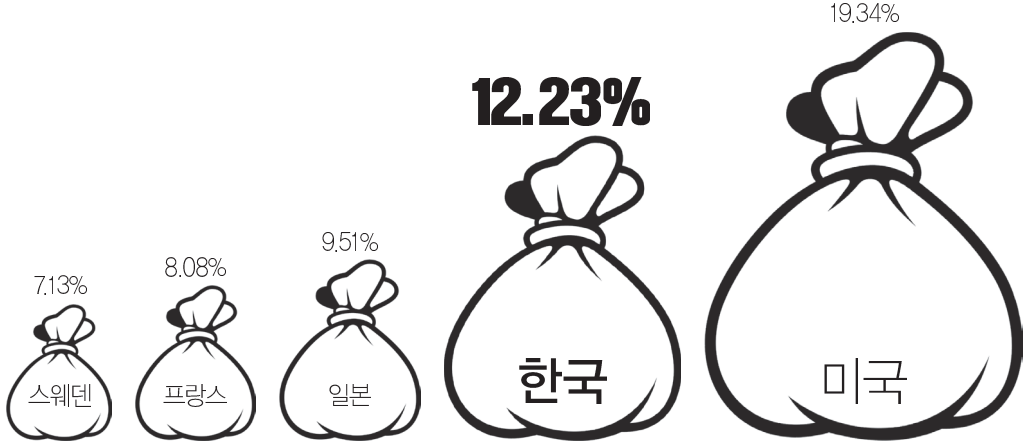
● 해고 규제 완화

정부는 상시적 해고를 손쉽게 만들려 한다. 지난해 말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은 그 시작이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 업무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이는 정년연장으로 자칫 해고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현행법은 취업규칙 개악 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는 이를 정부 지침으로 무산시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악 등을 관철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단체협약을 우습게 보고, 개별 노동자들을 압박해 취업규칙 개악에 나서기 쉬워진다.

상위 1%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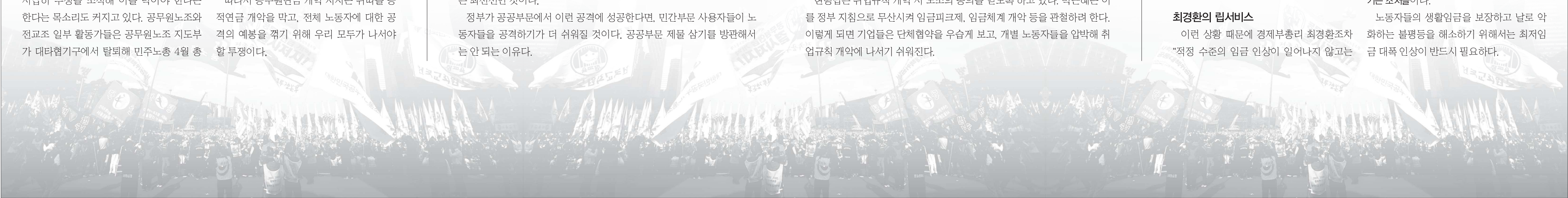
최저임금 대폭 올려라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었다.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5천5백80원)으로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노동자 1명의 생계비조차 총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밥 한 끼 값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한 시간 일해 봐야 겨우 빅맥 세트 하나 사 먹을 수 있다. 연간 1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을 벌려면 최저임금으로 1년 내내(1천7백92시간) 일해야 하는 지경이다. 게다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백9만 명에 이른다.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다. 이번 경제 위기 이후 실질임금 인상률은 0퍼센트대로 정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도 악화하고 있다. 반면, 재벌들의 공간은 차고 넘치고 있다. 2014년 말 국내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백3조 9천억 원으로 1년 사이에 또다시 37조 6천3백억 원이나 증가했다.

최경환의 립서비스

이런 상황 때문에 경제부총리 최경환조차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결국 립서비스로 그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당시 국무총리 정운찬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지만 재벌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최경환도 지난해 7월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기업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된 것은 없었다. 결국 최경환은 최근에 임금 인상이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발 물러났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시급 8천 원, 월급 1백67만 원)를 적용하라고 지침은 내렸지만, 이를 어기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3월 말까지 노사정위에서 ‘합의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3대 현안(통상임금, 노동시간, 정년연장)이 죄다 임금을 삭감시키는 조처들이다.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날로 악화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4·24 총파업을 투쟁의 도약대로 만들자

최근에는 총파업이라는 말이 너무 느슨하게 쓰이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본래 총파업은 여러 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노동자 계급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의 하나다.

총파업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부 공격의 규모를 볼 때 그에 걸맞은 투쟁이다. 박근혜가 단지 한두 부문의 노동자들

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면적 공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면적 공격에 맞서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4·24 총파업이 무늬만 총파업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이나 남미 등에서 정부의 내압 강요에 맞서는 총파업에 수차례 벌어졌

는데, 이런 총파업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우리도 총파업이라는 말을 공문구로 만들지 않으려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 대다수가 4월 24일 파업에 실질적으로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위력적인 대규모 집중 파업 집회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물론 현재 민주노총 총파업이 현장 조

합원들의 강력한 압력에 떠밀려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1905년 러시아 총파업이나 1968년 프랑스 총파업은 아래로부터의 주도력과 에너지가 충만한 총파업이었다. 오래 지속됐고, 정치적 요구와 경제적 요구가 결합됐고, 파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끌어들었고, 혁명적인 성격을 띠었다.

현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

이와 달리 현재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도력은 한상균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4·24 총파업에 회의적일 필요는 전혀 없다.

현장 조합원들은 지난 임원 선거에서 투쟁을 이끌 지도부를 선택했다. 그리고 지도부를 거슬러 투쟁에 나설 자신감은 없는 조합원들일지라도 지도부가 소명하는 총파업에는 나설 수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임원들이 현장을 순회하며 진정성 있게 파업을 호소하자 현장 분위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집행부의 파업 호소에 응해 기층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서도록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주도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쟁적인 지도부의 등장은 투쟁에 좋은 출발이지만, 그 자체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열쇠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있다. 총파업을 성공시킬 힘은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기층의 활력이 없으면, 아무리 투쟁적인 지도자일지라도 타협 압력을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지도자들과 보조를 맞추려 할 수 있다.

4·24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강한 경고를 보내고 공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설 힘과 자신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선 4·24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

활동가들은 투쟁이 최대한 멀리 나아가도록, 규모가 가능한 한 크고 전투적으로 되도록 애써야 한다.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물론 박근혜의 공세에 제동을 걸려면 하루 총파업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4·24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조합원들의 사기를 북돋는다면, 4·24 총파업은 투쟁을 더 전진시키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활동가들은 총파업이 투쟁의 디딤돌이 돼 일련의 파업들과 투쟁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 32번의 총파업

지금 시리아가 집권한 그리스는 지난 5년 동안 32번의 총파업이 있었다. 처음에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호소하는 총파업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내 전투적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주도력이 높아

졌다. 그것이 수십 차례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정권을 네 번이나 무너뜨린 비결이었다.

현장 활동가들은 긴 눈으로 멀리 내다보며,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주도력을 높여 나가고자 애써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3월 28일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미당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삼성노동자 결의대회**
오후 2시, 서울 노현역

4월 8일

**2015 청소경비노동자대회 —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생활임금, 고용안정을!**
오후 4시,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예정
(4월 11일 울산)

4월 16일

총파업 선포대회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전국 집중 범국민추모대회**

4월 24일

총파업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